

# AI 전쟁 시대, 국가 안보와 윤리적 활용 고민해야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반기문재단 외교안보  
실장·전 주폴란드 대사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드론 기술

작년 말, 눈 덮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평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는 북한군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들은 ‘드론 받이’로 희생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신기술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가히 ‘기술 전쟁’으로 불릴 만하다. 전쟁에 동원되는 신기술은 드론, 사이버, 첨단 위성통신 및 인공지능(AI) 등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드론 전술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AI와 사이버 등 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드론과 무인기는 사실상 동의어다. 즉, 사람이 탑승하여 조정하지 않는 무인비행체(UAV)를 의미한다. 드론의 최대 장점은 훌륭한 가성비다. 500달러 수준으로 군사용 드론을 구할 수 있다. 2000만 달러짜리 탱크나 300만 달러가 넘는 미사일처럼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저공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은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려운 은밀한 침투 공격에 적합하다. 무인비행체는 당초 군사적 용도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무인기 형태는 19세기 중엽 오스트리아 및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

발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최초의 무인항공기를 발명하는 데 성공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인항공기는 적 기지에 투입되어 정찰과 정보수집의 임무를 담당한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원격탐지와 위성 제어 장치 등 첨단장비를 갖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다. 나아가,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여 지상군 대신에 적을 공격하는데 활용되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과 통신, 배달, 촬영 등 민간 및 상업용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드론은 그 형태에 따라, 회전익과 고정익 및 틸트로터형 등으로 분류된다. 회전익은 헬리콥터, 고정익은 여객기의 원리다. 틸트로터형 항공기는 양쪽 날개가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며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소형 무기인 드론은 군집을 이루는 ‘벌떼 드론’을 통해 군사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드론 전쟁’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자폭 드론과 1인칭 시점(FPV) 드론이 각광받고 있다. 중,장거리 자폭 드론은 적의 전자, 장갑차, 헬기 및 이동식 레이더 등을 타격하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주목받는다. 골판지로 제작되는 드론은 일종의 ‘종이비행기’인 만큼, 제작비가 더 저렴하고 탐지와 요격도 극히 어렵다. 골판지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활용하면서 그 성능이 입증되고 있다. 고글을 쓴 군인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원격 조종하여 참호 속의 군인 등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1인칭 시점 드론(FPV)’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율살상용무기(LAWS, 소위 ‘킬러 로봇’)의 경우, 로봇과 AI, 드론이 결합된 미래형 무기인데, AI가 장착된 로봇이 인간(적군)의 생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및 윤리적 측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한편, 미사일 방어를 위해 요격 미사일이 동원되는 것처럼, 드론을 방어하는 데에는 고출력 에너지를 이용한 레이저 무기가 매우 효과적이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거래의 일환으로 파견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리며 다수가 드론에 희생되고 있다. 북한군의 1인당 봉급은 월 2,000불 수준이라고 하는데, 약 11,000명의 북한군이 파견되었으니, 상당한 규모의 ‘피 묻은 외화’가 김정은에게 송금되어 핵미사일 개발과 증성 확보 용 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아울러, 전쟁에서 북한군들이 드론 받이로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은 현대전에서 드론의 위력을 실감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의 드론 개발 역사를 잠시 짚어보면, 군사용 드론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어 최초의 군사용 드론인 ‘솔개’가 1981년에 개발된다. 현재, 우리의 드론 기술력은 세계 7위 수준이다. 2013년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는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나선다.

그 결과, 2023년 4월 ‘드론 킬러’로 불리는 ‘천광(天光)’을 개발한 데 이어,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비추어, 2023년 9월 드론 작전사령부의 출범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유사시, 우리 군인들이 드론 방어용 무기를 각자 휴대하고 전투에 임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국방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 미래전에 활용해야 한다.

## 社說

# 파업 GGM, 노사갈등 종식없인 평화없다

## 노사민정 특위 중재 나서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의 파업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GGM 노조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존수를 파기하고 파업을 강행했고, 파업 수위도 점차 높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GGM 주주단은 노조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및 투자지분을 회수하겠다고 강경 대응이다. 전국 최초의 광주형일자리 1호인 GGM이 풍전등화다.

GGM 노조는 전임 사무실 마련과 급여 7%(15만9200원) 인상·호봉제 도입·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노조간부 20여명, 14일 조합원 등 70여명, 16일 4시간 동안 부분 파업 등을 벌이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GGM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력은 550여 명으로 이 중 225명이 GGM 금속노조를 출범시키며 파업을 예고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가 퇴색되는가 하며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지역경제계의 우려를 키웠다. 결국 파업으로 ‘노사상생발전’은 파기수순을 밟고 있다.

GGM을 이끄는 주주단도 뿔이 난 상태다. GGM주주단은 최근 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업 등으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주주단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와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투자지분 회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강력한 조치다. 결국 파업으로 향한 GGM노사갈등의 간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노사민정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출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7인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은 지혜를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결렬됐던 임단협 협상부터 재개해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주된 역할이겠지만 GGM노조가 출범한 이상 매년 노사간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참에 특위를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노사간 상생문화의 기틀을 마련, 지속가능한 ‘광주형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 수련시설 공공성 살리자

## 시민 소통 위한 개선책 내놔야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교육시설을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방해 달라는 것은 공공시설의 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옳은 지적이다.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2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유스호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에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대상을 정하면서 숙소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0년 51건이던 광주학생교육원 본원의 숙소시설 대여는 2021년 20건으로 감소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단 한 건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소 이용대상을 교직원과 그 가족으로 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교직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광주를 제외한 타 시도 교육청이 산하 수련원을 일반시민 등에게 개방하는 것도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과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일반에 개방하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부 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수련시설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 또 다른 방안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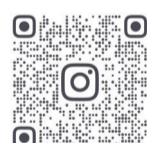
학교나 학교의 시설물은 학교의 소유가 아니다. 이용대상을 교직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용률을 떨어뜨려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수련시설 운영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학교 시설물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 우선이지만 그 결 이유로 시민과의 소통을 막고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통의 전형이다.



@jnli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전남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전남일보  
E-Mail: jebo@jnlibo.com



## 서석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산다. 이 말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산소를 흡입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너무나도 일상적이면서 불변의 원칙이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역대로 수많은 천재들을 잡아 먹은 법전이지만, 여전히 진화중이고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다. 틀린 곳도 있을 것이다. 분명.

그럼에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제도기간과 선포기간을 분리해야 한다. 그만큼 법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당연히 이런 법을 집행하는 곳은 매우 신성한 곳이다. 그곳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정의가 집행되는 곳이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떤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곳이며, 의와 불의가 평가 되는 곳이고, 범죄와 일상이 구분지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

을때도 분노한 국민은 많았지만 법원을 쳐들어간 이들은 없었다. 법과 법원의 판결은 그것이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지키고 준수해야 할 제1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을 침범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것이며, 우리의 정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용서와 포용의 대상이 아니다.

## 일벌백계

이것은 단죄의 대상이요, 일벌백계의 원칙이 냉혹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영향력은 침범한 무리들이 반성하고 또 반성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그들을 유혹하고 등을 떠밀어 넣은 이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자 한 무리들이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재떨이, 쓰레기통 등을 집어 던졌다.

소화기도 난사했다. 심지어 출입금지가 돼 있는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들어가 영상을 찍고 문을 부셨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저들을 감옥에 넣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민주주의의 국가이자 법치국가라고 하겠는가.

우리가 정의라고 믿는 것을 저들에게 빼져리게 알려주길 바란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libo.com m.jnli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libo.com